

청소년 주류 판매 님 이의제기·행정심판 검토 및 행정구제 보고서

이의제기·행정심판 행정처분 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이의제기·행정심판 행정구제 전문



박현식 행정사

제13101068464호

행정사합동사무소 인승

의뢰인 및 사건 접수 기본정보

의뢰인	청소년 주류 판매 님	연락처	010-2345-6547
상담일자	2026-09-18	사건분야	이의제기·행정심판 행정구제 및 처분 감경
관할기관	관할 행정청 및 유관기관	조사의뢰	청소년 주류 판매 님 사실조사 및 증빙 분석
제안 수입료	3,190,000 원 (VAT 10% 포함) (기본보수: 3,190,000원 + 사건특례: +0원, 난이도: x1.0)		

담당행정사: 박현식 행정사 (행정사합동사무소 인승)

- 공인행정사 자격번호: 제13101068464호 | 직통상담: 010-5082-1742
-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979, 양주빌딩 6층

핵심 행정 노력 목표: 이의제기·행정심판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 구제 및 감경

행정처분 사전통지 소명 및 법정 감경(1/2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 달성

의뢰내용 확인 및 사실관계 진단

상담 접수 내용 중심 심층 분석

의뢰인 상담 접수 원문 요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어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 되어 종업원은 조사를 받고 현재 경찰에 송치가 된 상태이고, 업주인 저는 영업정지 2개월 통지를 받았어요."

사건 경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및 단속 사실관계 확인: - 경위 요약: 행정처분(사전통지) 수령에 따른 단속 경위 및 사실관계 소명

주요 쟁점

고의성 부존재 소명 및 법정 감경 요건 검토: - 핵심 쟁점: 법령 위반의 고의·중과실 부존재 입증 및 비례원칙 위배·법정 감경(1/2) 적용 쟁점

구제 요구

의견제출서 접수 및 행정심판·집행정지 청구: - 조력 방향: 의견제출서 공식 접수 및 과징금 전환 또는 1/2 감경 처분 유도 (생계형 구제)

사건 진단 매트릭스 (행정사 1차 정밀 진단 총괄)

구분	현재 사실관계 및 상태	행정사 사실조사 판단 및 입증 방향
사건 성격	의뢰인 사안에 따른 사실관계 분석 및 행정절차 진단	사실조사 및 입증서류 편철을 통한 권리구제 지원
처분청 경향	부당한 처분 또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 정황 확인	공식 의견서 제출 및 입증자료 구비로 부당성 차단
권리구제 우위	관계 법령상 요건 및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가능	공인행정사 사실증명 및 4대 핵심 증빙으로 권리 확립

1. 쟁점별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행정 입증 방향

[가] 사실관계 확인 및 고의성·중과실 부존재 입증

검토 결과 및 행정 의견: 의뢰인의 사실관계("행정처분(사전통지) 수령에 따른 단속 경위 및 사실관계 소명")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령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입증자료를 집중 구성.

[나]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 및 법정 감경 규정 피력

관련 대응 방안 제시: 관계 법령상 감경 사유("법령 위반의 고의·중과실 부존재 입증 및 비례원칙 위배·법정 감경(1/2) 적용 쟁점")를 원용하여 영업정지 일수의 2분의 1 감경 및 과징금 대체를 처분청에 공식 청구.

[다] 처분 확정 시 긴급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 연계

권리구제 절차 제시: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정상 영업권 확보.

2. 단계별 사실조사 및 행정 입증자료 구축 로드맵 (Action Plan)

1단계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객관적 소명자료 채증

● 실무 목표: 사전통지 수령일 기준 10일 이내 객관적 소명 기초 확립

- 단속 당시 상황 입증자료(CCTV 영상, 결제 영수증, 사실확인서 등) 채증
- 의뢰인의 성실한 의무 이행 정황 및 양형 참작 사유(반성문, 탄원서) 편철

2단계 처분청 공식 의견제출서 작성 및 접수

● 실무 목표: 처분 확정 전 법정 감경 및 과징금 전환 처분 유도

- 위반 행위의 경위, 고의성 부존재, 생계 곤란성 등을 법리적으로 구성한 의견제출서 접수
- 처분청 담당자와의 사전 실무 협의를 통해 처분 수위 최소화 개진

3단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행정심판 청구

● 실무 목표: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 도출 및 본안 감경·취소 재결 확정

-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동시 접수
- 답변서 송달 시 반박 보충서면 제출 및 구술심리 입회를 통한 적극 권익 방어

1. 객관적 사실증명을 위한 4대 핵심 입증 증빙 체계 (행정사법 제2조)

① 기초 사실관계 증빙 서류

의뢰 사안의 실제적 진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서증 확보.

② 행정사 사실확인증명서 / 의견서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공인 서류 작성으로 공증력 확보.

③ 관계 기관 공문 및 결정문

관계 법령상 권리 보호 요건을 증명하는 결정적 공적 증빙.

④ 상대방 교신 내역 및 최고서

의사표시의 도달 및 의무 이행 촉구 사실을 명백히 입증.

2. 행정 수입료 견적 및 제안 사항 (수입료 계산 결과)

구분	세부 내역	금액 (원)
기본 업무 보수	이의제기·행정심판 사실관계 정밀 검토 및 기초 행정 분석	3,190,000 원
선택 전문 실무 옵션	· 이의제기·행정심판 수입 약정 절차 대행 (+0원)	+0 원
최종 제안 수입료 (VAT 10% 포함) (착수금: 2,550,000원 / 잔금: 640,000원)		3,190,000 원

3. 의뢰인 준비 서류 목록 (핵심 6종 증빙)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또는 처분명령서, 적발보고서)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3 사건 당시 사실관계 입증자료 (CCTV 영상, 결제 영수증, 현장 사진 등)
- 4 대표자 반성문 및 종업원·주변 관계인 탄원서(서명부 포함) 각 1부
- 5 경제적 곤란 소명자료 (부채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 등)
- 6 행정사 선임 약정서 (수임계약서) 및 위임장 날인본 1부

중요 4. 종합 행정 의견 및 의뢰인 필수 행동 수칙

★ 행정사 최종 결론 및 실무 방어 지침

이의제기·행정심판 법령 및 심사기준 준용 행정사 총괄 소명 가이드

인송 행정구제 총괄

종합 소견 본 사안("행정처분(사전통지) 수령에 따른 단속 경위 및 사실관계 소명")은 의뢰인의 영업권 및 생계와 직결된 긴급한 사안으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단계부터 신속하고 치밀한 법리 소명을 진행하여 처분 수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필수 수칙 행정사합동사무소 인송은 의뢰인님의 상황과 여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절차를 설계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인허가·처분 반려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겠습니다.

※ [법정 업무 범위 및 권리구제 안내]: 본 행정사합동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에 의거하여 사실조사, 사실확인증명서 및 녹취록 작성,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을 적법하게 조력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등)의 작성·대리 및 민사집행(압류·추심, 강제경매) 절차는 의뢰인 본인 직접 진행(전자소송) 또는 변호사·법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므로 본 사무소는 이를 협업 변호사·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객관적 사실증명 서류를 지원합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인송은 의뢰인님의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합동사무소 인송

행정사 박현식 (직통상담: 010-5082-1742)

공인행정사 자격번호: 제13101068464호

행 정 사 박 현 식

